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 23(목)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3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4-2-4)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에 대한 재허가,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장산유선방송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이 허가유효기간이 다음 달 2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설변경허가 건입니다. 운용채널 변경을 위해서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4개사가 EBS 채널을 5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 그리고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또한 TBS채널(2번 13번)을 중복송출 하였으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번 채널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변조기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이 아날로그 채널 1개를 증설하기 위해서 변조기를 추가하는 건, (주)서경방송이 디지털 채널과 VOD채널 증설을 위해서 변조기를 추가·교체하는 건, 금강방송(주)이 디지털 채널 1개를 증설하기 위해서 변조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장산유선방송이 개인사업양도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해 왔습니다.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검토 결과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서 방송, 법률, 회계, 기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 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근거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방송(주)은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 이상인 677.87점을 획득하였으므로 미래부 하나방송(주) 재허가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최근 재허가 이후에 디지털 전환 투자실적과 지역채널의 투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에는 디지털 전환 관련 목표 및 투자계획, 지역채널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건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7개사의 시설변경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므로 시설변경허가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장산유선방송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양도하여 대표자만 변경되므로 미래부 신원조회 결과 등에 하자가 없다면 변경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의 재허가 건에 대해서는 외부자문단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부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여 지역채널 투자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함을 조건으로 사전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역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미래부의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7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와 장산유선방송에 대한 변경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그 결과를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14-2-5)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통위·미래부 공동소관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1월에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심사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합니다. 다음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방송 등을 해야 하고,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임무를 가집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난방송 준칙과 사생활 보호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보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6조제1항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난방송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재난방송은 요청이 없더라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청'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KBS가 건의했으며, 저희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재난방송 등의 목적으로 기존의 '사후적 수습·복구' 이 부분만 당초에 규정했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예방'의 효율성 제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안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주관방송사가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기사·영상을 다른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치'는 다른 방송사가 자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비구축까지 책임지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치'를 '제공'으로 수정해 줄 것을 KBS가 건의했고, 저희 검토결과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변경안은 역시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에 고시 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면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이 되는 것입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여태까지 KBS가 주관방송사가 아니었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저는 이 고시안을 보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모두가 재난방송사는 KBS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정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경제 위원장

- 이것이 가벼운 고시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이러한 작은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인해서 빠져버린 것, 최근에 카드 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는데 이것도 가볍게 으레 그러려니 하던 것들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KBS의 문제라기보다는 방통위 실무적인 책임자들이 이런 것을 너무 지나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모

든 일에 가볍지만 굉장히 큰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넘겨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허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 시에 또 재난이 엄청난 것을 부르는데 이렇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 의해서 KBS가 주관방송사로 지정된 것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한 부분에 불찰이 있었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중 방통위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래부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래부는 그동안 방통위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미래부가 별도의 규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사업자를 담당하되, KOBACO를 새로이 추가하겠습니다. 한편 미래부 소관인 SO사업자, 일반PP사업자, 위성사업자,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에는 행정예고, 부처협의, 규제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는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보시면 '05년 11월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었고, '07년 6월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3년 2~3월까지 강원·대전·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MOU가 체결되었고, 11월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12월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부산·광주에 정부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서 지금 2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관 이래 센터당 연평균 13만명, 2013년 말까지 누계로 135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공 인프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집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9만명에 대해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차량장비 및 제작시설을 제공하고, 지역방송사들이 화면해설, 수화방송 등 장애인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방송제작 전문인력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부산·광주 2개 지역에서 '15년 말까지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되면 지역적 편중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만, 대구·제주·경기·세종시 등 수요가 많은 미설치 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파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되어 체계적·효율적 운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역에 분산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담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이 많은 이용인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대학 과정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발성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방향으로 '15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7개소 확대에 이어 미설치 광역시·도에 추가 설치해 전국 조직을 완비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전국 조직을 바탕으로 초·중·고·대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미디어꿈나무양성, 미디어센터 모델 해외수출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대전·인천 센터를 개관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대전·인천 미디어센터 개관 일정 관련 <표>를 보시면 3월까지 3개 센터에 대한 채용을 완료하고, 4월에는 강원·대전의 센터 개관, 그리고 7월에는 인천 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서울 성북과 울산 센터의 경우에는 기존 규모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1개소당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만 성북·울산 센터 설립에는 각각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규 센터의 규모를 예산에 맞춰 축소하기보다는 기존 센터와 유사한 규모를 확보해 1차 개관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운영

방식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개시하여 2015년 6월에 1단계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2015년 말까지 다른 센터와 동일한 규모의 센터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및 기능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추진은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계속 위탁·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3년 6월 발의된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에는 법인화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 대상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 및 전·현직 방송인이 참여하는 '방송멘토 교육' 실시, 대학 연계 미디어교육 전공과정 시행 등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미디어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과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국에 분산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청자 지원 종합 포털'을 개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의 법인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포털을 통해서 미디어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보를 DB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미디어센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전'을 7개 센터가 모두 참여해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공모전·세미나·전시회를 망라하는 종합 미디어 페스티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송영상 분야 창업이 촉진되도록 창업지원 교육, 창업 컨설팅 등 서비스도 새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국가와 초청·방문 등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성공 사례를 해외로 전파하고 미디어센터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국제세미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시청자지원 종합 포털을 개설하고, 4월에는 강원·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7월에는 인천센터 개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청자미디어 페어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 성북,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MOU를 해당 지자체와 체결하고, '14년 하반기에 센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6월까지 서울 성북,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꼭 해야 합니까?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만약 올해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법인 명칭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고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앞으로 미디어센터가 가서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과 교육을 실제..., 차

라리 미디어교육센터라고 하든가, 하지만 미국에서는 '뉴지엄(Newseum)'이라고 해서 미디어에 박물관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했는데, 여기는 방송만 합니까? 지역의 프레스 관계도 함께 다른 데에는 되어 있던데 방통위원회니까 방송통신이 주지만 '미디어'라고 하면 프레스도 포함됩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현재는 방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라고 하면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역사적 박물관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역의원들이 지역의 수요 요청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큰 지역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된 것이 마감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지요? 확대하는 것이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렇게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현장에 가보니까 미디어센터 직원들의 신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미디어센터 법인화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할 것이 없습니까? 법안 내용 검토 다 해 봤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새로운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일단 법인화되면 나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더 필요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미 낸 법안도 지금 발전과 진행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 법안에 보충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그래서 다음 국회 열렸을 때 소위에서 논의될 때 그 부분이 보충되

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2013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다> ‘2013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013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5월 20일 2012년도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2013년도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1차 회의, 7월 29일 사업자 대상 1차 의견수렴, 9월 27일 전문가 2차 회의, 10월 22일 사업자 대상 2차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평가항목 중 제작 경쟁력보다 경제적 성과 배점 기준이 커서 제작역량평가라는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총점 순위뿐만 아니라 경쟁력 세부요인별 순위 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대상입니다.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항목은 2012년도 최초 제작역량 평가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프로세스, 성과 각각 나누어서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 분야는 인적 경쟁력, 물적 경쟁력, 그리고 프로세스는 제작 경쟁력, 유통 경쟁력, 성과 분야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등록대상 방송사업자의 제작 경쟁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경쟁력’ 배점을 기존 200점에서 350점으로 높이고, ‘경제적성과’ 배점을 300점에서 150점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히, 제작경쟁력 하위 요소 중 ‘신규콘텐츠’ 배점을 170점에서 300점, ‘신기술콘텐츠’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개 경쟁력 요인 중 ‘프로세스 경쟁력’은 25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되고, ‘성과경쟁력’은 400점에서 250점으로 축소되며, ‘자원경쟁력’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2> 3대 경쟁력 요인별 배점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 방안은 콘텐츠 산업 육성 취지 및 상대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우수등급 이상을 공개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결과 이외에 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3개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결과도 우수등급 이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공익채널 선정 심사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익채널 선정 심사에 가능한 부분에서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심사와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역량 평가의 참여를 제고하고, 제작지원사업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반영 배점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상 특별상 “제작역량 우수상”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3월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나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배점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점수를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첫 해에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점수가 급격히 변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성과가 지금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배점이 아주 과다하다고 줄였으면 앞으로 성과가 쌓이게 되면 이 배점이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도 이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 PP 사업수익을 보면 MPP 계열이나 지상파 계열 PP들이 수익을 전체 PP 수익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계열 PP들은 대부분 지상파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서 방송하고 있고, 또 MPP 계열도 CJ 계열 외에는 거의 자체제작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자체제작에 대한 배점을 높임으로써 결국에는 자체제작을 많이 하지만 수익이 낮은 중소 규모의 PP들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제작지원사업에 10%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PP들에게 간접적으로 제작지원사업에 유리한 점수 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의견들도 수렴하고, 중소콘텐츠 PP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감안해서 배점을 높게 150점 상향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중소PP들 쪽에서도 성과경쟁력,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다면 이런 배점들은 추후에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지금 보면 결국 3가지 부문에서는 자원경쟁력이나 프로세스경쟁력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역

량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종전의 2개의 배점이 600점이던 것이 지금은 750점으로 바뀌었고, 반면에 성과경쟁력은 400점에서 250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라. 201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안건 라> ‘201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2000년 10월 「TV시청행태 연구」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조사는 2013년 5월 28일~7월 29일까지 전국 3,434가구, 그리고 각 가구당 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전원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매체보유 현황입니다. TV 수상기 보유율은 96.9%로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디지털TV 가구 보유율도 68.3%에 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유는 94.5%로 일 반화되었고, 다기능 미디어인 스마트폰 보급도 68.8%로 증가하여 미디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 특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가 무엇 이냐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TV가 필수매체라고 답한 비율이 46.3%, 스마트폰은 37.3%, PC/ 노트북은 12.9%가 선택하였습니다. TV의 중요도는 2012년 53.4%에서 46.3%로 낮아졌고, 스 마트폰은 2012년 25%에서 2013년 37.3%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연령별 필 수매체 인식 현황입니다. 10대의 61.8%, 20대의 67.3%가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응답한 반면 50대는 73.7%, 60대 이상은 93.2%가 TV를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전년에 비해서 30대, 40대, 50대가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의 중 요성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매체 이용시간 및 연령별 이용빈도입니다. TV 시청량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모든 매체 중에서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은 1시간 44분, PC/노트북은 1시간 38분, 태블릿PC는 1시간 8분, 라디오는 1시간 5분, 신문은 30분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TV 이용빈도가 높 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20~30대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40~50대의 이용률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하여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의 이용이 전체 연령대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매체 이용에 따른 미디어 대체 관련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 이용으로 기존

의 TV 이용시간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9.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10대, 30대의 TV 이용시간 감소 인식 비율이 높았고,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 비이용자에 비해서 TV 이용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TV를 대체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 이용에 관한 조사내용입니다. TV 시청 중 다른 매체 이용률은 스마트폰이 47.5%로 가장 높고, PC/노트북이 12.6%, 신문이 6.5%로 나타났습니다. TV 시청 중 다른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로는 '습관적으로'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채팅/메신저 이용' 그리고 '다양한 정보 검색' 등이 중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TV 프로그램 시청 중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2년 27.9%에서 2013년도에는 31.7%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시청 중인 TV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SNS, 문자메신저, 정보검색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2012년 17%에서 2013년 28.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TV 이용시간대는 저녁 9시 전후의 TV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전 12시~오후 5시를 제외하면 지상파 이용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상파TV 이용률은 저녁 9시대에는 45.8%, 아침 8시대 13.8%로 케이블TV 등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오후 2시대에는 케이블TV 이용률이 3.7%로 지상파 1.3%로 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지상파TV의 경우 주중 저녁 8시~9시 사이에는 60대 이상 이용률이 높았고, 저녁 9시~11시 사이에는 30~40대의 이용률이, 저녁 11시 이후에는 20대의 이용률이 높아서 연령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보이는 트렌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TV 가구 보유율이 68.3%로 증가하였고, 다기능 미디어인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로 미디어 이용의 디지털화, 개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이용이 TV 등 전통매체에서 스마트기기로 비중이 확산되는 경향을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컨대 시청점유율 측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으로 TV시청 방식이 수동적 시청에서 TV시청과 동시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검색과 SNS를 이용하는 등 능동적 시청, 네트워크 시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한다면 신규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시간대에는 지상파방송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부 낮시간대는 유료방송이 우위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책 당국과 방송사업자가 편성과 방송광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 말까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과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송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학계의 학술연구, 그리고 시청자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방송사, 통신, 미디어들 통 틀어서 종합적으로 현재 방송시청률뿐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까지, 그래서 앞으로 방송통신사들이 회사별 전략, 광고전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반인 또는 학계에

서도 학술적으로 조사하는 아주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국내에서 유일한 조사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처음이면 유일한 것이지요. 우리 언론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만 아주 심각하게 알고 계셔서 앉아계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것을 아주 간지에 상세하게 이런 부분의 흐름과 현재 미디어의 판도, 경향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학계에서도 필요하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책자로 나갑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1월 말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고, 안행부의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분석도 어려웠을텐데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안건 없으시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제가 기타 안건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불편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이 문제제기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보도자료에 방통위 사회적 쟁점사안에 관한 보도 관련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JTBC 뉴스9에 대한 중징계 제재조치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참담하다, 첫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재조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 5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낼 일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낼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정부 측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만을 출연시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에게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및 여권인사는 배제한 채 야권인사의 의견만 들었다는 점에서 동 건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시장은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은 정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부분

을 첫 번째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 한 번 물어봅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관행에도 없는 보도자료가 왜 나왔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실무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돼서 방통위로 넘어갔다는데 방통위에서 처리가 됐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

○ **김충식 부위원장**

- 김 국장,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틀이 있고 원칙이 있게 행해야하므로 보도자료를 내고 안 내는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에 국정홍보처라든가 정부의 대변인 기능이라든가 혹은 문광부의 정보홍보 기능들을 빼서 공정한 방송통신 업무만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법 자체의 취지가 그렇고, 이 법이 논의될 때 국회의 입법과정의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목동의 방통심의위에서도 추천측이 대통령 셋, 새누리당 셋, 민주당 세 사람 그렇게 해서 6:3으로 정해진 데서 격렬한 논란 끝에 넘어온,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파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내가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5명 중에 3:2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뭐는 내고, 뭐는 안 내고…, 지금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재희 씨라는 퇴역 정치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 국장!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언론을 통해서 옛날에 이름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우파논객이라고 할까, 우파적 가치관을 관철하는 대표 중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재희 씨가 조선일보 정치부장,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정희 시대의 국회의원, 5공의 정책의장, 6공의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은 공안정국이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붙이겠지만 정권주도의 통진당 해산청구는 난센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히틀러 시절에 미국으로 망명한 역사학

자 이야기까지 빌어서 “권력이 이렇게 남용되면, 손톱을 많이 쓰면 약하게 보인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수언론의 핵심이라고 할 동아일보 논설실장 지낸 전진우라는 사람도 “야, 어떻게 됐기에 JTBC 뉴스 제재가 그렇게 한심하게 처리되었는가? 목동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방통위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간단히 보도자료를 하나 보내고 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방통위 설치법의 근거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 홍보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면 지금 종편4사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중징계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내용들이 정부 측 인사와 정부 측 발언과 정부 측 입장만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정부 측이라는 개념이 현 정권을 향해서만 오로지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것 다 중징계 제재조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보도 관련 방심위 의결내용은 서면 의결하지 말고 본회의로 올리십시오. 그래서 보도 관련 방심위 내용은 여기에서 대면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쓴 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1월 12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회의, 11월 20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청취 및 논의를 하였으며,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2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제재를 결정합니다. 네댓 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들이 이 표현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셔야 하고, 두 번째 보도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이제까지 초기에 서면의결했는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보도 관련은 대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이 양 위원이 전에 없던 보도자료라는데 그렇지 않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끊겼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제가 방송기반국장으로 온 이후에 작년에도 기자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위원님께서….

○ 양문석 상임위원

-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어떤 생각을..., 저희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낸 것입니다. 특별히 방통위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똑같은 이야기인데 평소에 기껏 하지 않다가 불쑥 정파성의 보도자료를 낸게 화근입니다. 좋아요. 가치중립적이고 서면결의해서 넘어간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JTBC 제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이 흑과 백으로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부분을 그것이 방통위라고 하는 정부 행정조직의 야당 추천인사가 2명이 있는 조직에, 합의된 의견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한 부분, 역사, 법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충식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역사성, 과거에 통합방송법을 만든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보처를 없애면서 언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가의 언론간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방송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방통위원회를 만들면서 심의는 민간방송심의위원회가 맡게 되었고, 내용심의를 우리 방통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과반수가 됐다, 3분의 1이 됐다, 한 사람이 반대했다, 여야가 있으니까 여야 추천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그러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라든가 징계조치의 내용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행정조치면 행정조치 하는 대로 가벼운 것, 일반인이 관심 없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알 수 없고, 과거에 왜 공정성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는 지적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심의에서 논의해서 왔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원고 한 자도 우리가 더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또 처분도 이것이 인적인 기관에 대한 경고와 인적사항에 대한 징계까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종편에서 내용상의 문제가 돼서 심의를 해서 올린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경고, 또 징계 있는 그대로 하고, 국회에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집행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했을 뿐이지, 거기에 덧붙인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전례가 없는 발표를 하느냐, 발표 여부는 중요도에 따라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위원장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은 끝까지 논쟁을 해 봅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써 주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이나,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조가 그것입니다. 독립성입니다. 계속해서 이 논의를 길게 가면 어떤 논의까지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 '위원장의 사조직화되어 가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아주 불편한 사실까지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마크를 붙이고 보도자료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이경제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유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면 그것도 똑같겠네요?

○ 이경제 위원장

- 양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방통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이름들 잘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에 심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 우리 법에는 엄연히 심의위원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오면 우리가, 우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대로 내놓도록 했는데 발표했든 안 했든 우리가 사인했으면 행정조치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왜 보도자료를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누구의 판단으로, 무슨 이유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도자료를 내면 룰이 있어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안 내면 원칙이 있어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누가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내라', '이것 내지 마라',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공보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광부도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실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5명 합의기구로 만들자, 이것은 합의제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50:50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법취지가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여당에 더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위원들이 뻔히 이것에 대해서 무슨 색깔로 볼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도자료로 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과거에 채널A가 부적절하게 보도 낸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도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것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쪽만 하면 이것은 정부 홍보고, 저쪽 하면 저쪽의 홍보이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합시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논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 JTBC 문제는 기본적으로 흑과 백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보도자료를 낼 때에는 상임위원들과 같이 대면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하도록 사무국에서도 기억하십시오.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이번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의 보도.... 그런데 이 보도가 되든 안 되든 다 공개가 되는데 보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주로 국회에서 제기하는 것이 어느 쪽의 문제가 어느 성향에 있다고 할 때에는 문제제기를 그렇게 국회에서 제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나도 이쪽 편을 들었던 저쪽 편을 들어서 했던 방심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공개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보도자료를 냈느냐 안 냈느냐 측면인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면 앞으로 보도자료를 낼 것인지 하는 부분도 올리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도자료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언론이 관심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닌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이나 양 위원이 말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자든지 기준을 정해서 하자고 하면 우리도 언론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면 예를 들어서 김충식 부위원장이나 양문석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도자료를 한 번 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논의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보도자료마다 다 회의해서 낸다면 방통위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마비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 중에서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이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고요,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면 일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99%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방통심의위에서 넘어온 것도, 이런 시각의 차이가 확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또 미래에 판정이 끝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두협의든 대면회의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양해를 얻고, 좀 원만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논의의 쟁점을 정리가 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낼 자료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야 하는 보도자료였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도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홍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보

도 관련은 대면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설치법 제25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제1기와 제2기 전반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려서 대면회의에서 재심을 명령해서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서 또 재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한 번의 거름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재심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내용 또한 재심의 과정들이 있어서 격렬한 수습 장짜리 속기록을 만들어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보도 관련은 대면회의에 올려라,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의 관행은 기계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관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서 처리하자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의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닙니다. 어떤 자료든 보도자료를 가지고 대면회의를 하자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왜? 보도라는 것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무엇을 하나 보도해야 하는데 오늘 대면해서 회의하자' 그러면 내일 할 것입니까, 모레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예민한 사항이 있고 정말 논의를 해서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대면회의를 하자는 것은 말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리한 대로 보도자료라는 것이 관심사에 대한 것은 뭐든지 낼 수 있는데, 다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논의를 한 번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방통위가 행정기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에 관해서 이러니저러니 우리 자신이 논란을 일으키면 한정 없이 심의위원회의 논쟁을 우리가 다시 이끌어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에 관해서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또 내용에 관한 논쟁으로 분명히 여기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정부기관에서 어느 편을 든다, 안 든다는 쟁점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부적절한 이야기이고, 아까 양문석 위원께서 그 표현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조직 어찌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사조직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로 상임위원 이름으로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방통위원회 사유화하다'라는 기사를 보도자료로 내라면 내주실 거예요?

○ 이경재 위원장

-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더라도, 지금 그 이야기는 이경재가 사유화한다는 것이 아닌 이야기로 예를 든 것이지만 언론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유화, 이야기로

나중에 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방통위에서 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코트(" ", quote)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심의한 대로 우리는 통과의례로 행정처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누가 주장….

○ 양문석 상임위원

- 통과의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례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보도자료를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사유화 아니냐?' 사무국이 관행에 없던 이런 보도자료를 갑자기 튀어나오게 했는데….

○ 이경재 위원장

- 아니, 보도자료가 각계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보기에 위원회에 올린 예가 없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서 바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국장, 과장 전결 언제 됐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통위원회 설립 초기에 과장 전결로….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의결해서 서면의결로 돌아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 기억에 불과 1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재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다 모든 방심위 의결사항들은 대면회의에 다 올라왔고, 그리고 그 부

분에 대해서 문제없으면 대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을 요구해서 재심하게 만들었고….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정확하지 않는데 방통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는 그대로 방송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방송사업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됐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라, 제1기 때부터 정확하게 훑어서 다시 공개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실제로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양 위원님, 됐습니다. 무용한 논의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목동의 심의내용이 이쪽에서 정리가 되어서 행정권의 제재로 끝이 나서 보도가 되든 보도가 되지 않든 그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그대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꼭 꼬집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사유화(私有化)에 대해서도 회의장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저도 국회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는 이경제의 사유화가 되고 있는데 두 상임위원은 뭐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대면 누구라고 설명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 말미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까지나 투명해야 할 우리 방통위 행정, 그리고 상하가, 또 여야 추천 세력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화합하고 일해야 할 분위기에서 돌출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온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보도자료는 상식에 입각해서 한다, 사무국도 상식이 있고 또 이러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 없이 정파적인 문제가 부딪칠 것에 대해서는 다섯 분 상임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상의하고 또 그런 합의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이상의 무용한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양문석 위원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표현이 자칫하면 이것은 코트(" ", quote)가 코트(" ", quote)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할 수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양문석 위원에 대해서 제가 코트(" ", quote) 한 번 할까요?
- 양문석 상임위원
 - 하세요.
- 이경재 위원장
 - 사실관계하고 코트(" ", quote) 자체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코트(" ", quote) 안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 코트(" ", quote)를 악용 당할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만큼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사유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제가 거절한 것이 몇 건씩이나 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 보실래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세어 보실까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아니, 됐습니다.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음 또 워크숍도 있고, 어쨌든 여야 추천 위원들끼리 화합하고 잘 나가야 되는 일이, 이번 일로 이렇게...
- 이경재 위원장
 - 부위원장님의 완곡한 중재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폐회】